

임신사전검사 예산 소진 광주 예비 부모들 ‘허탈’

올해 7천300여명 지원 조기 종료
작년 4천400여명비 65.9% 늘어
범위 확대 불구 예산은 1억 줄어
민원 多…市 “복지부에 상향 전달”

최근 병원에서 임신 사전검사를 한 이모(30대·여)씨는 검사비로 20여만원을 지출했다. 검사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보건소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의했으나, 예산이 소진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올해 초 2세를 계획하며 난소 기능 검사 등을 예정한 김모(30대·여)씨도 얼마 전 보건소 문을 두드렸으나,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몇 달 전까지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1년의 절반이 막 지난 시점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선택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면서 광주 지역 예비 임신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가 사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한 2세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 검사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 연령군은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로 나뉘며 각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

원 비용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광주시에 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7천3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 전체 신청자 수 4천400여명보다 65.9%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신청하면서 502525의 비율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올해 세운 예산 5억1천400만원은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신청하면서 502525의 비율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올해 세운 예산 5억1천400만원은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소진의 이유로는 수혜 대상의 폭은 넓히고 예산은 도리어 줄인 게 꼽힌다.
실제 지난해 광주 지역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이 많았고, 올해와 달리 부부여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비 임신부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남구청 누리집에는 지원 사업 초기 종료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월별로 한도를 정해 신청을 받거나 예산을 늘리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기를 잘 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종료로 인한 문의가 이어져 현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 중 일부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광주·전남서 ‘흉기 사건’ 잇따라

여수경찰, 말다툼 지인 살해 50대 입건
북부경찰, 입소자 살인미수 70대 체포

하룻밤 사이 광주·전남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랐다.
3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지인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B씨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A씨는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북구 신안동 한 요양 병원에선 입소자 C(70대)씨가 또다른 환자 D(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D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그가 자신의 목살을 잡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D씨는 이마와 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를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안재영기자



3일 광주 북구가족센터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및 위령제가 열렸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학살 75년 만 한풀이…유가족 비통·환희 교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북구, ‘희생지’ 양산동 인근서 개최
추모연대·유족연합회 등 공동 주관
동림동·장등동도 추모 위령비 설치

한국전쟁 전·후 광주 지역에서 사망한 민간인 4천여명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희생자 유족들은 너무나도 늦은 한풀이에 애통하면서도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뚝 수 있다고 기뻐했다.
광주 북구는 3일 오전 10시 광주북구가족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장재성기념사업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광주시 유족연합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외에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여순사건 유족회 등에서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위령제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은 북구가족센터 정문 앞에 설치된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곳은 과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장재성 선생이 희생된 장고봉 고개 인근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 일대에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위령제는 공연단체 ‘꿈짓플러스 나비연’의 위령평화통일무로 시작했다. 공연 후 참석자들은 희생자를 위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했다.

경과 보고를 맡은 박동기 장재성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은 한국전쟁 당시 외신 기자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의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 없는 민간인 학살은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의 존재를 망각한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역사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축문을 낭독한 영광석 장재성기념사업회 회장은 “희생자 영령이시여, 너무나도 늦은 오늘에야 위령비를 제막하고 위령제를 삼가 지내며 아뢰오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우리”라며 “꽃이 저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 유족연합회장은 “75년의 한 많은 세월을 피는

물로 지새웠던 우리 유족들은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추모일 제정 등을 통해 유족의 한을 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 회장의 추모사 후 참석자들은 대강당 중앙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 차례로 나아가 흰 국화꽃을 올리며 분향과 헌배(獻배)를 했다.
두 번의 절을 올리고 난 후 유가족들은 위령비 앞에서도 헌화했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 즈음부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2000년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시작했다.
광주 지역 주요 희생지는 북구 동림동 산동교(광산군 극락면 불공고개) 인근, 양산동 본촌산단(광산군 지산면 장고봉 고개) 인근, 장등동 도동고개(석곡면 도동고개)로, 각각 1천여명, 1천여명, 300여명씩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위령 사업을 추진한 북구는 최근 해당 지역마다 위령비 설치를 마쳤다. /안재영 기자

광주 농협 조합장 후보 비방 우편물…경찰 수사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광산구 한 지

역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비방하는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돼 이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우편물에는 A씨의 과거 행적과 조합 내부고

발내용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합장 선거는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성 우편물이 발송된 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을 위반 혐의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육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